

#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 국격 제고

-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
- FTA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확장
-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도약
- G20의 성공적 개최

## 소외계층 배려

-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
- 0~5세 보육은 국가가 적극 지원
-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장학금 지원
- 고졸자 채용 확대



“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협력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이른바 실무를  
정확히 반영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2009.1.8,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청년실업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는  
가장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각 부처가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전국적인 일용직 일자리 확충과 함께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 등  
주거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  
2009.1.15,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 CONTENTS

## 목 차

### I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정책 여건 06

### II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주요 경제 성과 07

- |                       |  |
|-----------------------|--|
| 위기 극복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li><li>2.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재정은 양호한 수준입니다</li><li>3.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벤처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li><li>4.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li><li>5. 국가경쟁력·기업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li></ol>                                     |
| 국격 제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6.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li><li>7.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넓어졌습니다</li><li>8. 해외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였습니다</li><li>9.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li><li>10.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을 높였습니다</li></ol>  |
| 소외계층 배려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1. 복지 지출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li><li>12.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li><li>13.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렸습니다</li><li>14.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li><li>15.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li><li>16. 고졸자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li></ol> |
| 농업 개혁과<br>노사관계<br>선진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7. 농식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li><li>18. 반세기 만에 농민의 숙원이던 농협 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li><li>19.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의 질도 개선하였습니다</li><li>20.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li></ol>  |

### | 참고 1 | 이명박 정부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31

- |    |  |
|----|--|
| 오해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부자 위주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li><li>2.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었다?</li><li>3.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고물가를 겪고 있다?</li><li>4.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썼다?</li><li>5.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li><li>6.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손해를 보았다?</li><li>7. 현 정부가 복지를 소홀히 했다?</li></ol> |
|----|--|

### | 참고 2 | 외국 언론이 본 한국 경제 4년 37

이명박 정부 4년간 성장과 고용이 회복되고,  
국가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생활물가 잡기,  
청년 일자리 해소 등 난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살리기’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두 차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크게 낮아졌으며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추세가 형성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 외신 등 국제사회에서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을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해외 언론에서 ‘교과서적 회복’이라 칭송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과 고용이 다른 OECD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나라의 곳곳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하여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고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복지 지출을 늘렸으며, 보육·주거·대학등록금 지원 강화, 고졸자 채용 확대 등의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국제 위상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FTA를 통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국가경쟁력과 기업환경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아직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생활물가와 청년층 등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은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지난 4년보다는 앞으로의 1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서민들의 어려움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 대 기

# I

##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정책 여건

**1**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 2008년 리먼사태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현 정부 (2008~2011)
세계 경제성장률(%)	3.2	4.8	2.8
선진국 경제성장률(%)	2.7	2.7	0.3

**2**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현 정부 (2008~2011)
국제 유가(두바이, \$/B)	19.7	51.3	77.0
국제 원자재(로이터지수)	1388.8	1842.0	2556.8
세계식량가격지수(FAO)	94.6	122.6	192.4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신 등은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을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였습니다.

- \* 한국은 미국의 대한 투자 손실과 환율관리 실패로 검은 9월로 가고 있음(2008.9.1, 영국 더타임스)
- \* 2009년 초 동유럽의 외환위기 가능성 고조에 대응하여 주요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은행 예대율이 높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국가(2009.2.28, 영국 이코노미스트)
- \*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자 출신으로 경제에 강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지만,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곤경의 한가운데에 있음(2009.2.27,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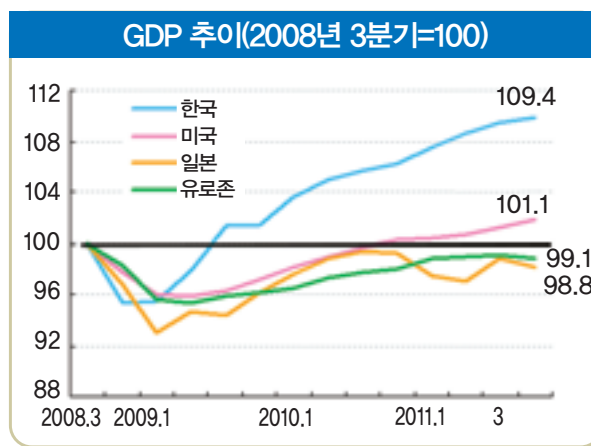
# II

## 이명박 정부 4년간 주요 경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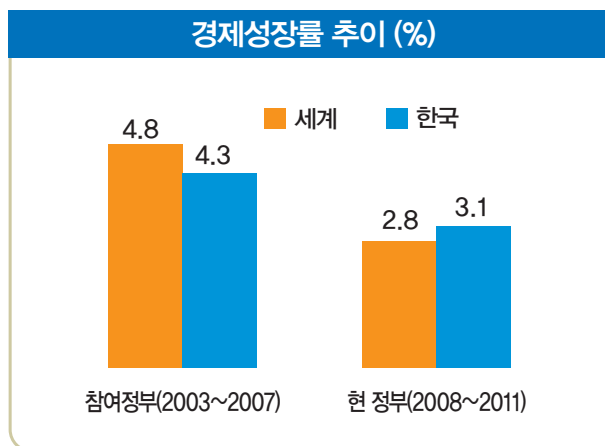
### 위기 극복

#### 성과 1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유로존,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 이전보다 9% 이상 성장



- 참여정부 때 세계 경제(4.8%)보다 0.5%p 낮은 성장률(4.3%)을 보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2.8%)보다 0.3%p 높은 경제성장률(3.1%) 기록



-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주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

**주요국의 취업자 증감(단위 : 만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2011년
한국	14.5	△7.2	32.3	41.5	66.6
미국	△68.4	△548.5	△81.4	80.5	△549.4
영국*	24.6	△44.1	1.9	17.8	△24.4
독일*	55.3	△7.0	26.7	95.4	115.1
일본	△26.9	△103.3	△25.4	△3.0	△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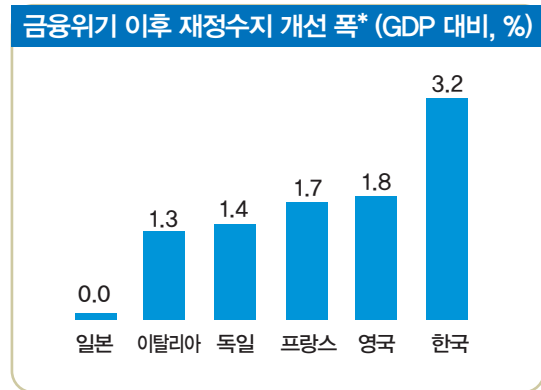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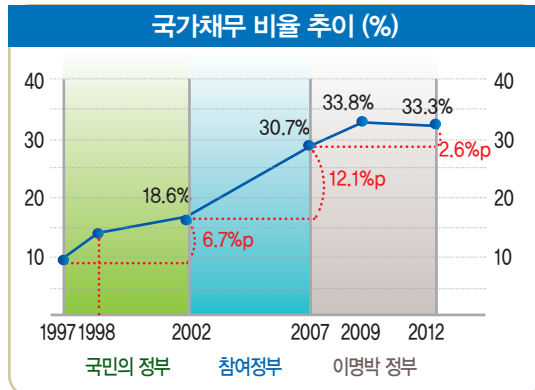
\* 독일, 영국은 2011년의 경우 1~3분기 평균

- 외환보유고 확충(2012년 1월, 3113억 달러), 단기외채 비율 감소(2011년 3분기 35.1%, 2002년 1분기 이후 최저치) 등 위기대응 여력도 확충
- 국제사회는 우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대부분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전망)은 상향 조정
  - 무디스(2010.4.14) :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A2→A1)
  - 피치(2011.11.7) :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A+ stable → A+ posi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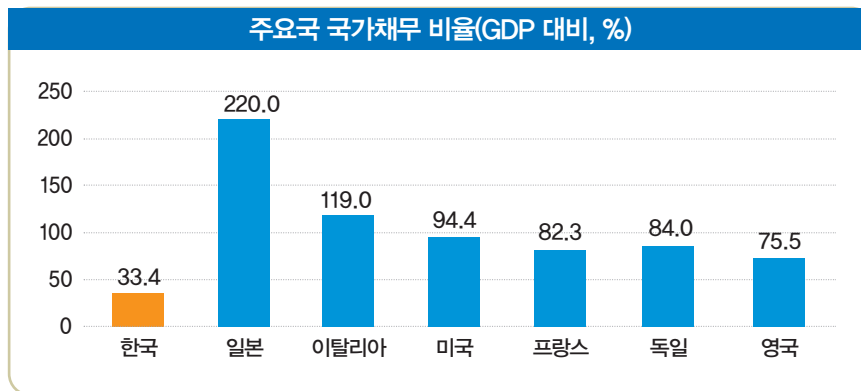
## 성과 2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재정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 두 차례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은 현 정부 들어 국민의 정부 (6.7%p), 참여정부(12.1%p)에 비해 증가 속도(2.6%p)가 크게 둔화



\* 개선 폭 : 2011년 전망치-2009년 결산치(IMF, Fiscal Monitor, 2011년 9월. 한국은 정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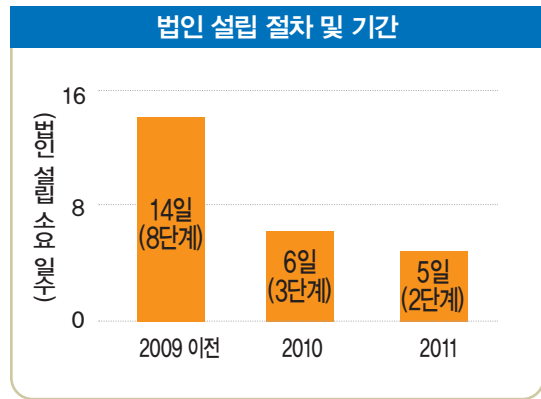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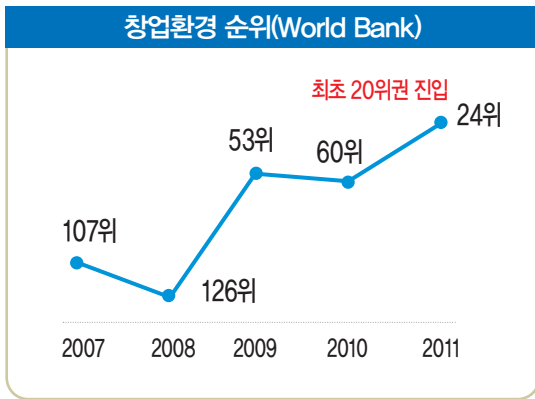
-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어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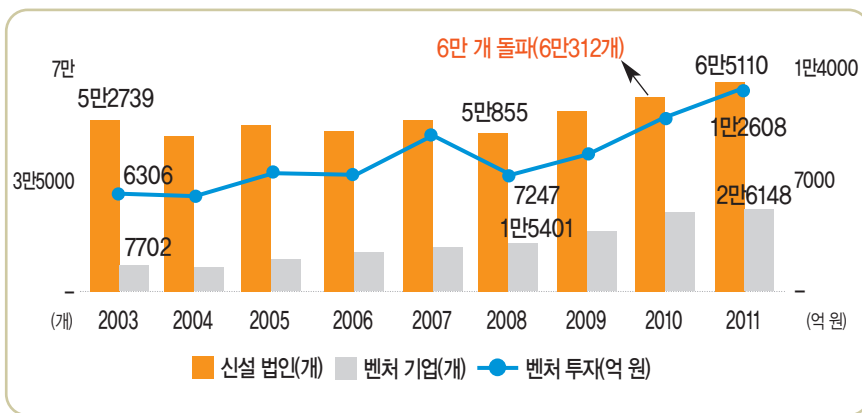
\* 2010년 IMF 기준

### 성과 3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벤처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창업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창업환경 순위가 전 세계 20위권대로 최초로 진입
  - 회사 설립을 온라인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재택창업 시스템을 구축(2010. 1)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



- 그 결과 창업이 활발해지고 벤처 창업 및 투자도 크게 증가



#### 정부별 신설 법인 추이(개, 연평균)

	참여정부(2003~2007)	현 정부(2008~2011)	증감(증가율)
연평균 신설법인 수	5만1581	5만8277	6696(13.0%)

-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도 빠르게 증가(2010년 말 현재 315개)
  - 천억 이상 벤처기업 순증(개) : (2005~2007년 평균) 28 → (2008~2010년 평균)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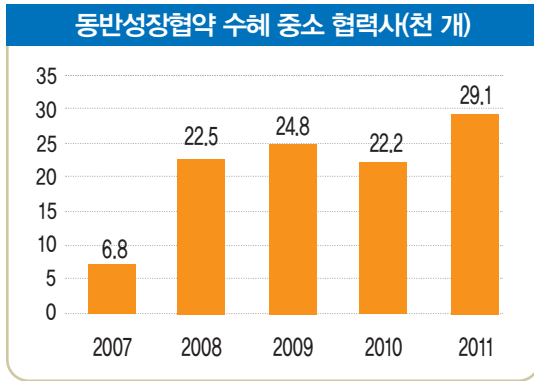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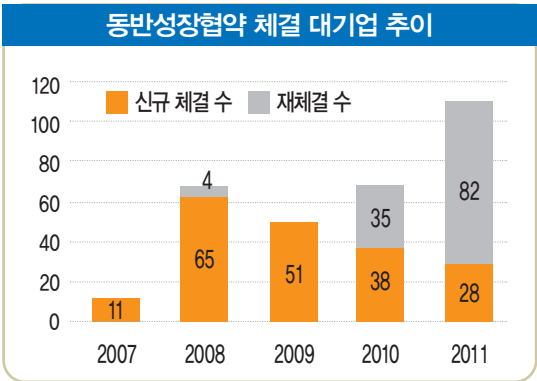
## 성과 4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2010년 9월 ‘동반성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동반성장 추진 시스템을 가동 중

-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2012년 1월 현재 두부, 김 등 82개 품목)
-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하도급법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등을 통해 변칙적 상속·증여 차단 및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 중
  -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2011. 12)
  - \*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 중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 상품대금 감액, 반품 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2012년 1월 도입)
- 아울러 MRO\* 및 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을 추진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 시 중소기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중소기업구매촉진법 개정, 2011년 7월)
  - \* 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원천 배제(SW산업진흥법 개정안 : 지식경제위원회 통과, 2012년 2월)

■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가 늘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협약 체결이 확산되는 성과

\* 30대 그룹 동반성장 지원 규모(천억 원) : (2010) 8.9 → (2011) 15.4 → (2012 계획) 17.2



● 현금성 결제비율 상승 등 거래 관행도 점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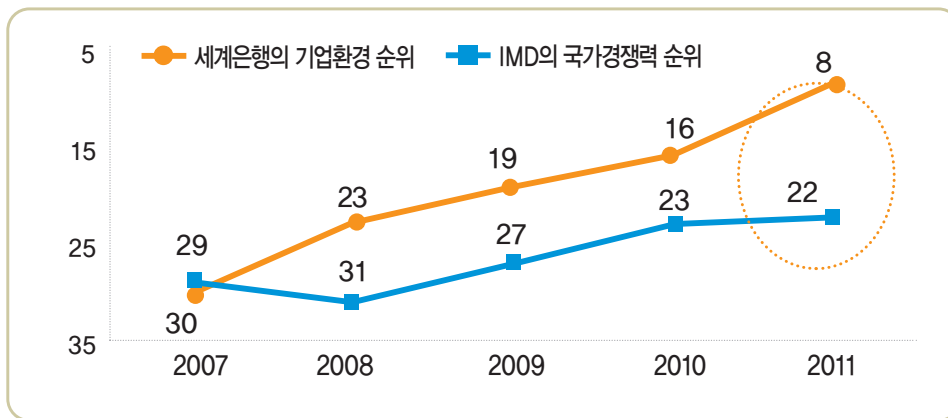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1998~2002)	참여정부(2003~2007)	현 정부(2008~2011)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	55	82	93

●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TV 홈쇼핑 업체들이 총 2359개 중소기업체(입점 중소기업체의 50% 수준)의 수수료를 2011년 10월부터 3~7%p 인하

## 성과 5 국가경쟁력·기업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 1 현 정부 들어 12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및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2011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09년 이후 3년 연속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승하여 2011년 사상 최고 순위(22위)를 기록
  -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 한국은 183개 국가 중 8위로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
- 2008년부터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15단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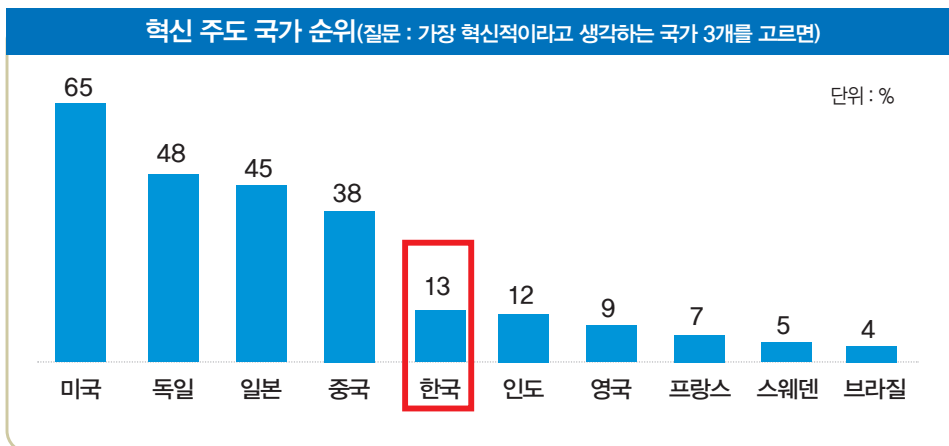


## 2 GE의 혁신 주도 국가 순위에서 5위

- 미국의 글로벌 기업 GE가 발표하는 혁신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혁신 주도 국가 순위에서 5위에 오름(2012.1.19)

### 〈GE의 '2012년 Global Innovation Barometer' 보고서 개요〉

- 조사 목적 : 다른 국가의 혁신 수준을 파악하여 GE 내부적으로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조사하여 발표
- 조사 시기 : 2011.10.15~11.15
- 조사 대상 : 22개 국가 주요 기업의 고위 임원 약 3000여 명 (한국 대기업 고위 임원도 100명 포함)
- 조사 기관 : 스트래티지원(Strategy One)에 위탁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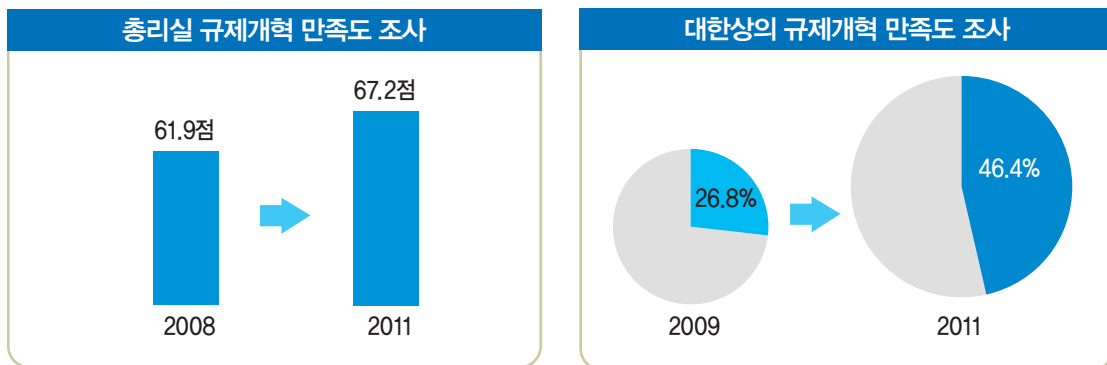


### 3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상승

■ 총리실, 대한상의 등의 일반 국민,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체감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리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리서치앤리서치) : 61.9점(2008) → 67.2점(2011)

\* 대한상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텔서치) : 26.8%(2009) → 46.4%(2011)



■ 올해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

- 산업단지 활성화, 열린 고용 및 청년창업 활성화, 국민 생활불편 제도 개선, 교통체계 선진화, 물류·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미래 스마트 인프라 구축

## 국격 제고

### 성과 6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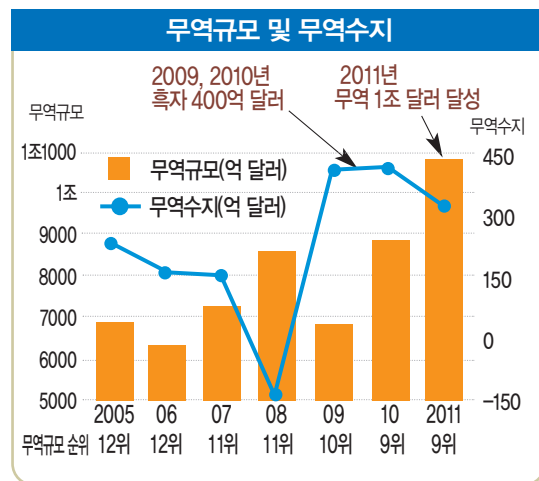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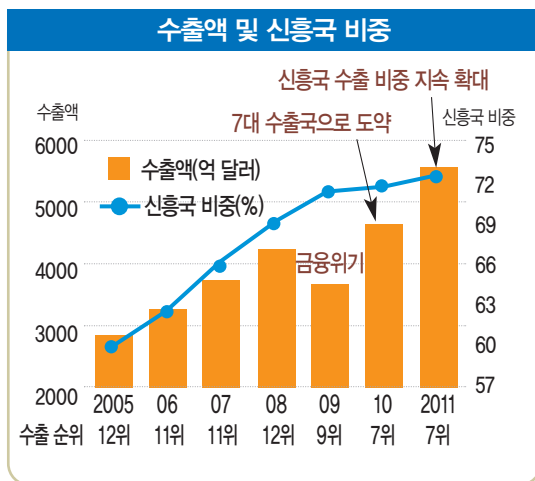
■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 도약에 이어,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

\* 1조 달러 달성국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

\* 금융위기 이후(2008→2010) 세계 교역은 6.2% 감소, 한국은 4.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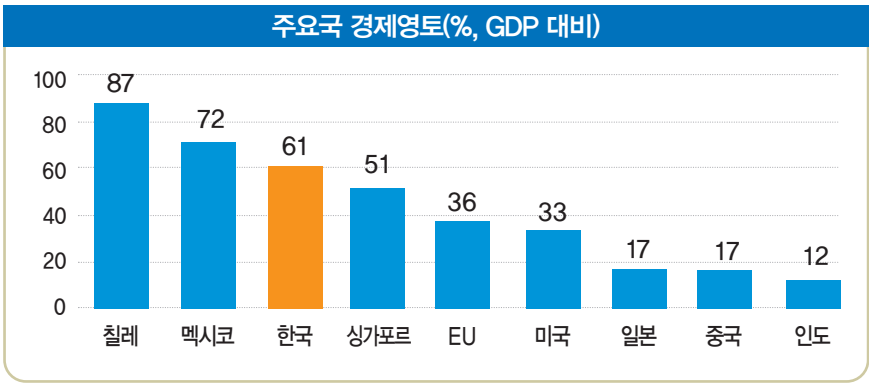
■ 아세안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기술 개발을 통해 부품소재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

\* 신흥국 수출 비중 : (2007) 65.9% → (2010) 71.7% → (2011) 72.6%

\*\* 부품소재 무역흑자(억 달러) : (2003) 62 → (2008) 348 → (2010) 779 → (2011) 876

## 성과 7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넓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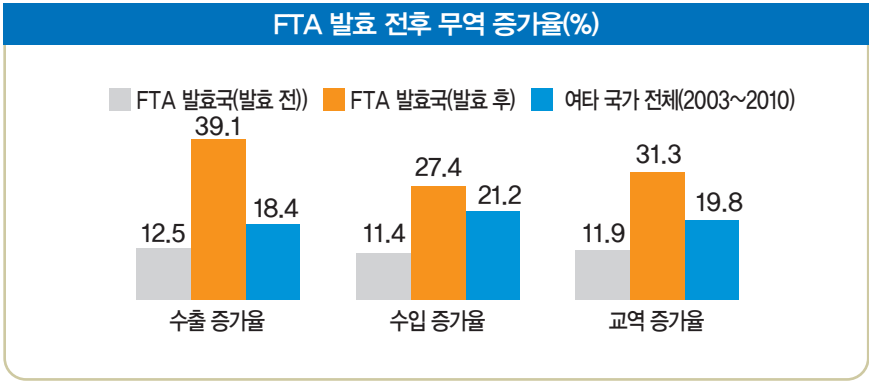
-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대륙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여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으로 도약
- 경제영토 세계 3위(세계 GDP 대비 61%, 미국 포함)로 중국, 일본 등 주변 경쟁국 경제영토에 비해 약 4배 수준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2010)

### ■ FTA 체결 이후 무역증가로 FTA 체결 효과 가시화

- FTA 체결국들과의 무역증가율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



- 한·EU FTA 발효(2011년 7월)로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를 최소화
  - 2011년 7~12월 중 전체 수출 : 7.9% 감소
  - FTA 혜택 품목 : 2.7% 증가 ⇔ 비 FTA 혜택 품목 : 34.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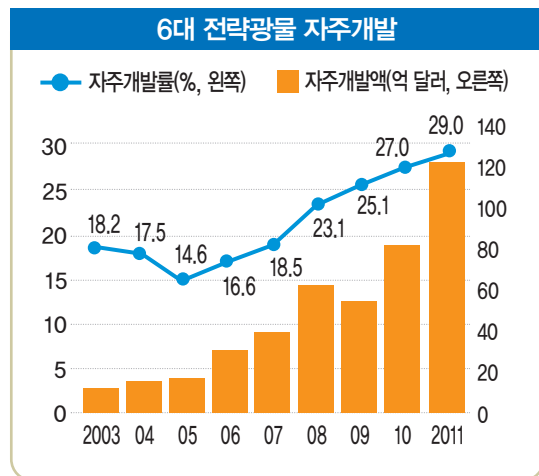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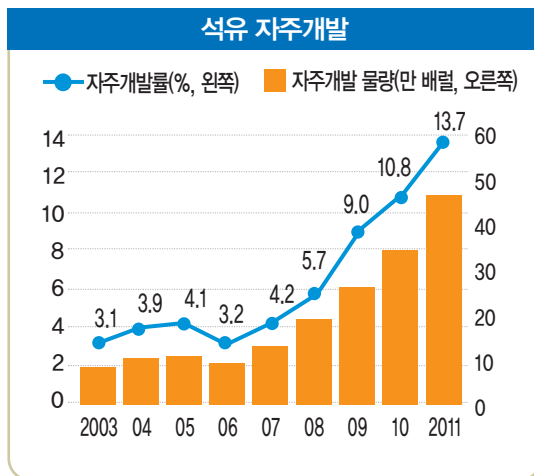


## 성과 8 해외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였습니다

###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로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기반 확충

- **(석유, 가스)** 2007년 4.2%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이 2011년 13.7%로 대폭 상승
  - \* 이전 정부 5년간 1.1%p 증가(2003년 3.1% → 2007년 4.2%)

-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007년 18.5%에서 2011년 29.0%로 대폭 상승
  - \* 이전 정부 5년간 0.3%p 증가(2003년 18.2% → 2007년 18.5%)
  - 리튬, 희토류를 신(新)전략광물로 지정,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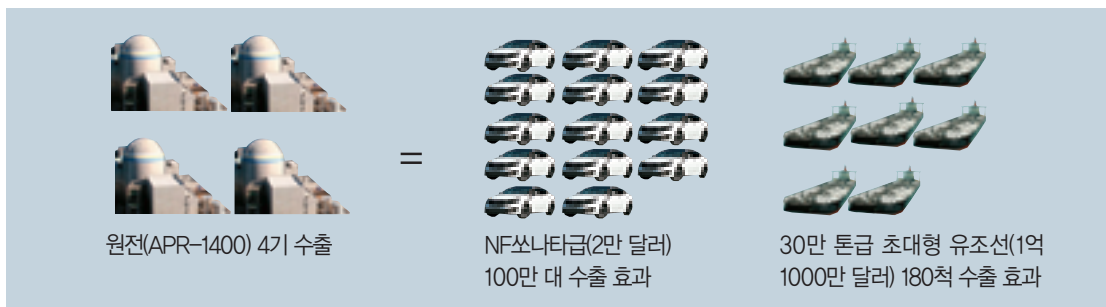


### 정상외교로 중동지역 이라크와 UAE에 최초 진출

- **(UAE)** 우리나라 자원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 기회를 보장
  -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 참여권 확보(본계약 체결 준비 중)
  - \* 1970년대 일본 이후 UAE에 진출하게 되는 첫 번째 국가
- **(이라크)** 세계 3위 석유 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 선점
  - \* 4개 생산·개발광구 확보(25개 입찰 참여기업 중 최다 광구 낙찰)

## 성과 9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세계 5대 원전 강국
  - 대부분의 원전기술을 국산화(2011년 기준 국산화율 95%)하였고, 2012년 말까지 100% 국산화할 예정
- 한국형 원전의 UAE 수출(200억 달러 규모, 2009년 12월)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
  - 세계 원전시장을 독점해온 아레바(프랑스), GE(미국), 히타치(일본) 등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
    - 건설 부문(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일괄 수출)만 200억 달러 규모로 쏘나타급 자동차 (2만 달러) 100만 대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
    -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연인원 약 3만 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



- 60년의 원전 수명기간 중 운전·기기교체 등 운영 지원에 참여 시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도 기대
- 한국형 원전의 추가 수출도 점차 가시화
  - **(베트남)**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원전건설종합계획’이 채택되었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2011년 11월)을 통해 원전 협력을 공식화
  - **(터키)** 터키 국민 방문 시(2012년 2월) 한·터키 간 원전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실무협상단을 파견(2012년 2월 말)하기로 합의

## 성과 10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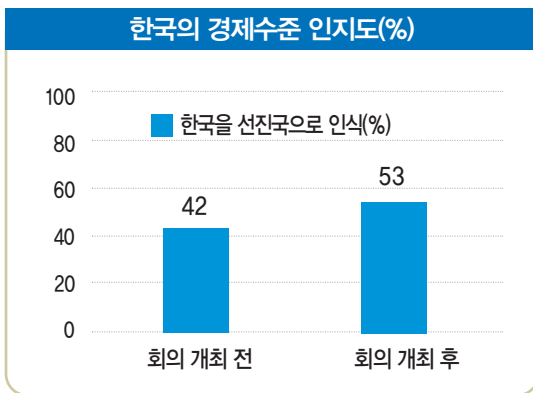
■ 아시아·비(非)G7 회원국 최초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

-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개발의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G20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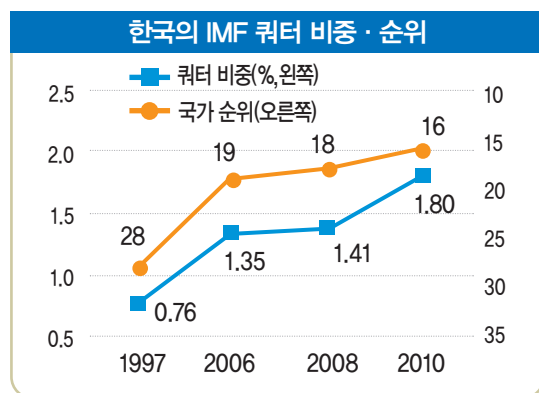
### G20에 트로이카 운영체제



■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격 향상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



\* 정상회의 직후 해외 16개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쿼터 개혁안, 합의 연도 기준

## 소외계층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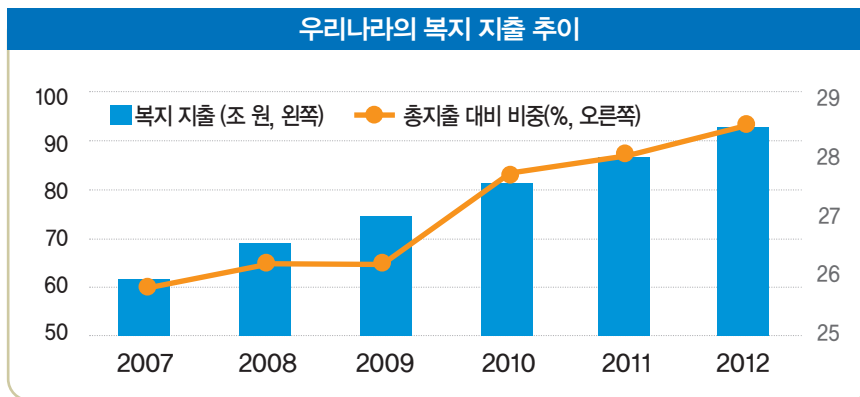
### 성과 11 복지 지출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복지 지출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8.5% 증가(역대 정부 중 최고)

● 200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2%p 높게 복지 지출이 증가

\* 복지예산 : (2007) 61조4000억 원 → (2012) 92조6000억 원

\*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 : (2007) 25.8% → (2012) 28.5%



■ 확대된 복지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 주요 예시

● 보육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007년 1조 원 → 2012년 4조 원)하여 5세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만 명) : (2008) 10.9 → (2012) 17.6

● 고령농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도입

\* 70세 고령농이 2억 원 상당 농지를 담보로 제공 시, 월 78만 원 농지연금 수령

\* 농지연금 수급 인원 : (2011) 1007명 → (2012) 2089명

●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 2012년부터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신규 지원

\*\* 2012년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2008년 378억 원 → 2012년 589억 원)

## 성과 12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 0~5세 보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대폭 확대

-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2012년에 0~2세·5세, 2013년 3~4세 유아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

\* 3~5세 공통과정 지원 단가(만 원) : (2012) 18~20 → (2013) 22 → (2014) 24 → (2015) 27 → (201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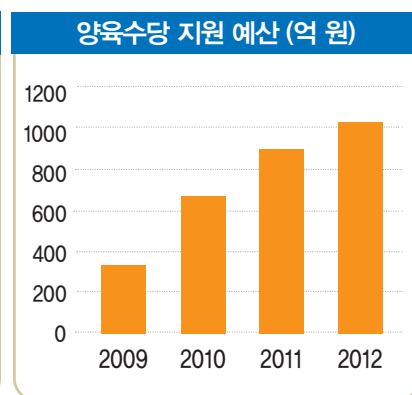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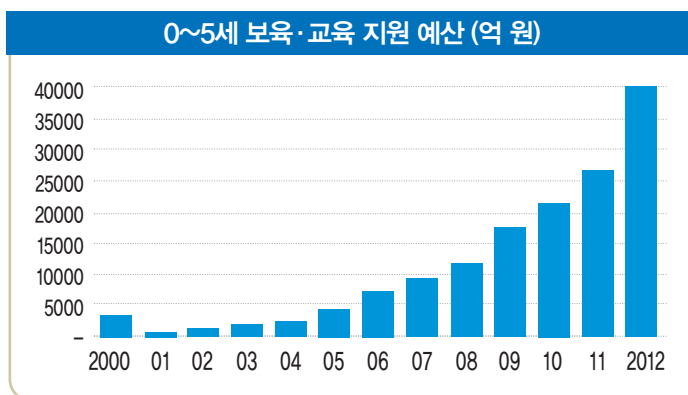
- 2013년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2009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

####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비전

구분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1단계(~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지속 확대</li> <li>* (2008) 차상위 → (2009) 소득 하위 50% → (2011) 소득 하위 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7월 양육수당 도입</li> <li>•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li> <li>* (2010) 24개월 미만, 10만 원 → (2011) 36개월 미만, 10만~20만 원</li> </ul>
2단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세 누리과정 및 0~2세 유아교육·보육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에 대해 취학 전(84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li> </ul>
3단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세 누리과정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소득 하위 70%)</li> </ul>

### ■ 이에 따라 0~5세 보육과 교육 관련 예산은 2007년 1조 원에서 크게 늘어 금년에는 4조 원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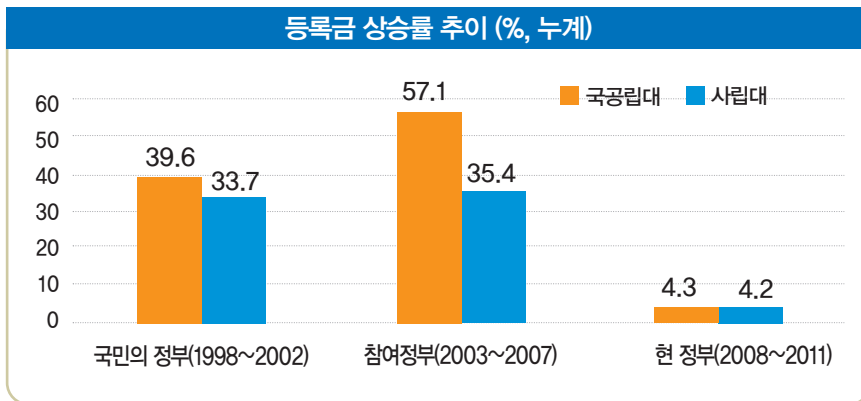


## 성과 13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 ■ 지난 정부까지 크게 올랐던 대학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

\*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2010.1)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

● 등록금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34~40%, 참여정부 때 35~57% 올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4%대 상승에 그침



\* 등록금은 매년 1, 2월에 결정되므로 2003년은 국민의 정부, 2008년은 참여정부에 포함

● 금년 중 등록금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동결 수준

### ■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을 도입(2010)하여 재학 중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

\* 수혜 대상(천 명) : (2010년 1학기) 115 → (2010년 2학기) 118 → (2011년 1학기) 156 → (2011년 2학기) 147

\* 금리 인하 : (2008.2, %) 7.8 → (2009.1) 7.3 → (2010.1) 5.7 → (2011.1) 4.9 → (2012.1) 3.9

■ 국가장학금은 과거 정부에 비해 약 20배 증가(2007년 1000억 원→2012년 1조9000억 원)

● 2012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2012년, 1조7500억 원)으로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

	지원 대상	내용	지원금(억 원)	부담 경감
I 유형	3분위 이하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3분위 20%~기초 100%)	7500	90만~450만 원
II 유형	7분위 이하	· 소득, 성적, 개인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 결정	1조 원	평균 75만 원
대학 자구 노력	-	· 명목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1조 원	평균 38만 원 (최대 51만 원*)
합계	-	-	2조7500	38만~563만 원

\* 대학의 자구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추가 13만 원 부담 완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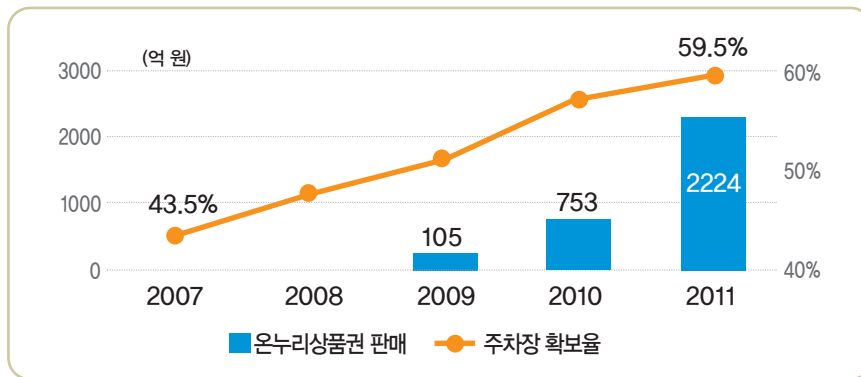
## 성과 14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 전통시장 예산 지원이 지난 정부에 비해 연평균 700억 원 확대

\* 정부별 전통시장 지원 예산(억 원, 연평균, 국비 기준)

	참여정부(2003~2007)	현 정부(2008~2011)	증가액(증가율)
연평균 지원 예산	1427	2107	679(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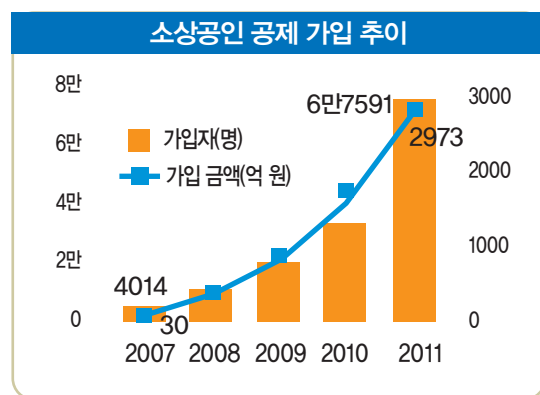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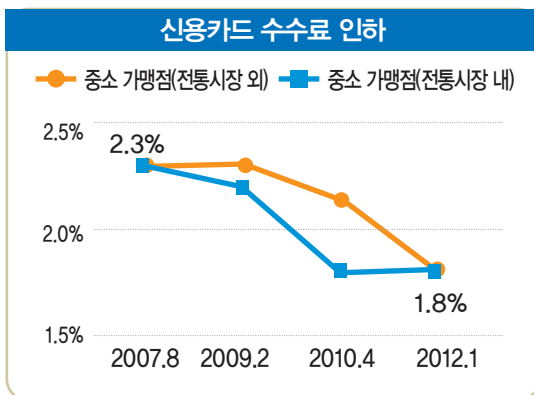
- 전통시장 상품권을 2009년 도입 이후 3697억 원 판매(2012.2.19 현재)
- 일반 국민이 전통시장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 지원, 길거리 주차 허용 등을 추진



\* 온누리상품권 : 2012.1.1~2.19. 615억 원 판매

### ■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공제\*도 대폭 확충

\* 소상공인 폐업·사망 시 보험금 지급(납입금 소득공제, 압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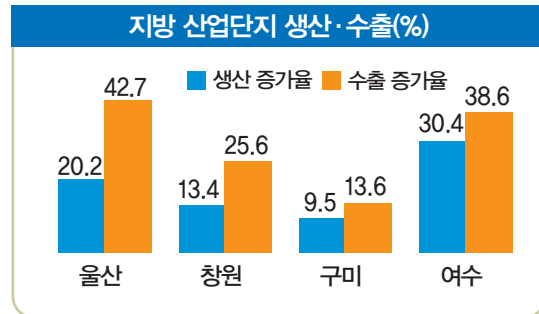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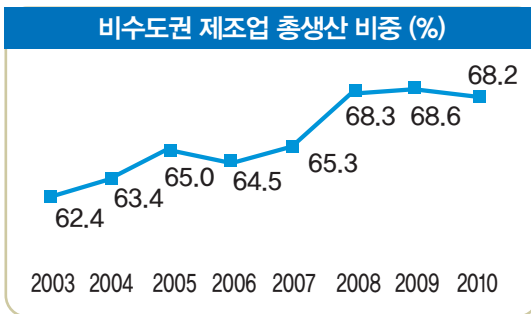


## 성과 15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들어 총 37조 원의 예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투입하고, 지방의 산업단지를 302개(총면적 141km<sup>2</sup>) 신규 지정하여 대폭 확충

구분	국민의 정부(1998~2002)	참여정부(2003~2007)	현 정부(2008~2011)
산업단지 지정(개)	35	135	302
면적(km <sup>2</sup> )	8	70	141

● 그 결과, 비수도권의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도 확대



■ 지방 주택의 매매가격이 상승세 ⇒ 역대 정부와 달리 지방의 주택가격이 수도권보다 상승세가 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완화

● 지방 주택의 인허가 실적도 최근에 급등세

### 주택시장 동향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매매가격 증가율(%)	수도권	5.0	1.2	△1.7	0.5
	지방*	0.6	2.0	6.4	15.1
인허가 증가율(%)	수도권	△34.7	29.1	△1.9	8.8
	지방	△31.4	△27.1	7.7	103.5

\* 지방 5대 광역시 증감률

### 역대 정부 주택가격 증가율 비교

	국민의 정부(1998~2002)	참여정부(2003~2007)	현 정부(2008~2011)
수도권	41.9*	39.3	4.9
지방 광역시	-	3.2**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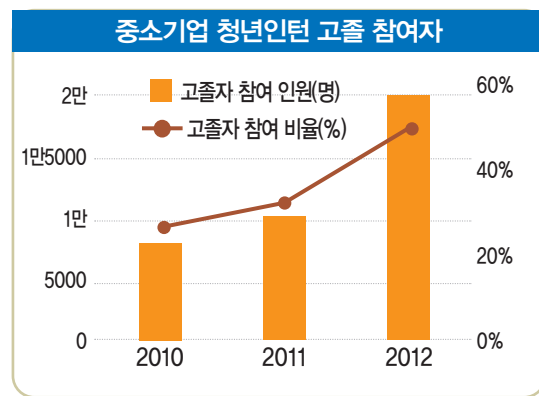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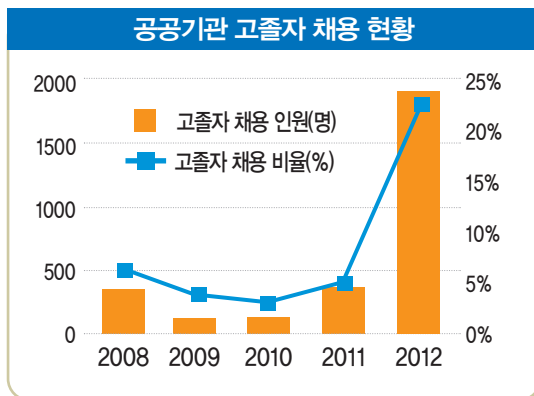
\* 2000~2002년 3년간 누계치(2000년부터 작성), \*\* 2004~2007년 4년간 누계치(2004년부터 작성)

## 성과 16 고졸자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학력’ 보다는 ‘능력과 실력’에 따라 대우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졸자 채용을 확대

-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고졸자 비중을 2012년에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 이내 40%까지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의 고졸 참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



- 고졸자 채용 붐이 금융권, 30대그룹 등 민간 부문으로 확산 중

- 금융권 : 은행의 고졸자 신규 채용 재개 등을 통해 연 1800명 수준(경력자 포함)이었던 고졸자 채용 규모를 2011년부터 연 2900명으로 확대

- 30대 그룹 : 2012년 고졸 채용 규모는 전년(3만4900명) 대비 9.8% 증가한 3만8300명 수준 → 2012년 전체 채용 규모의 30.9%

- 고졸자 취업 이후에도 진학 기회를 제공하여 대졸자와의 격차를 완화

- 공공기관 입사 후 대학 진학 시 학비 지원,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능력 개발 지원 및 열린 승진제 정착을 도모

-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후(後)진학 체계 구축을 위해 입학자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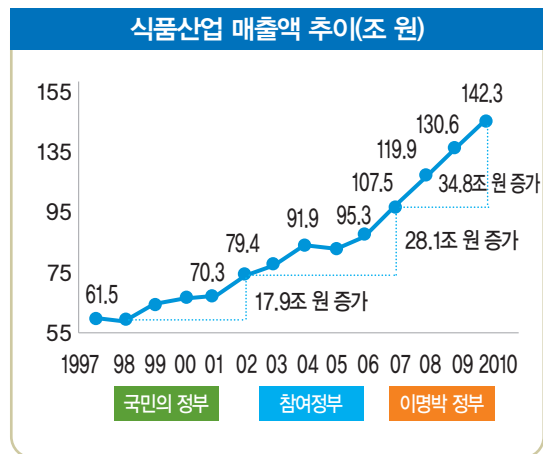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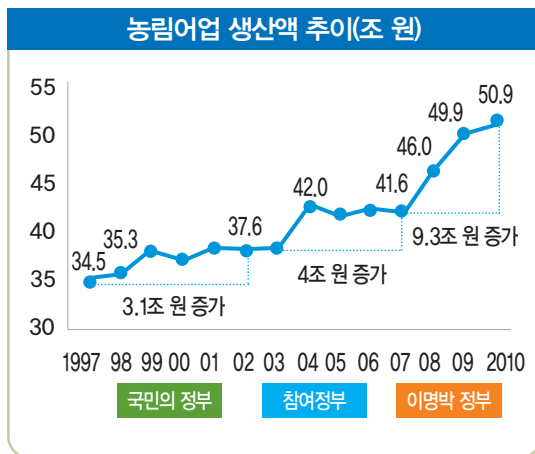
## 농업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 성과 17 농식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2005년 이후 41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은 2008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2010년에는 51조 원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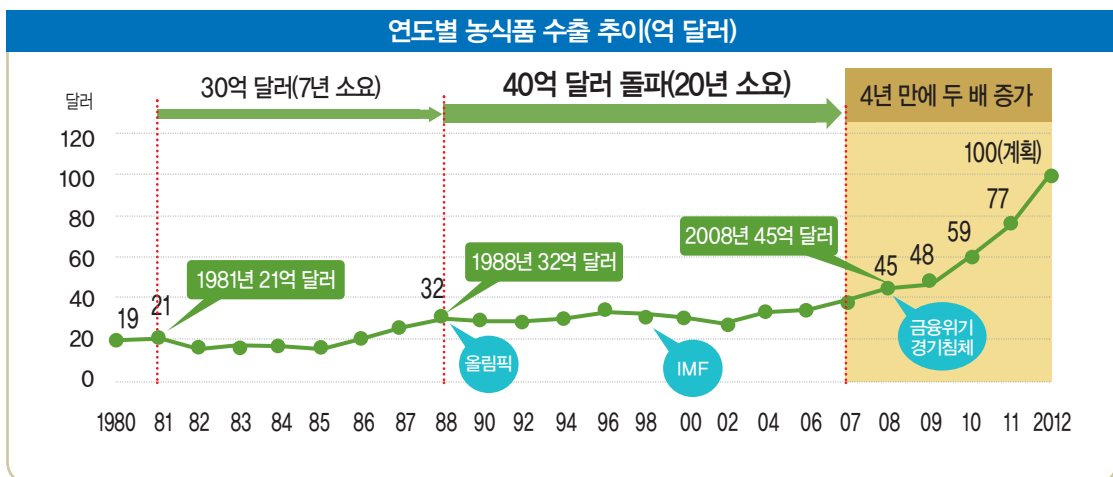
● 식품산업진흥법(2008년 6월 제정),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2008년 11월)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전략산업으로 육성

\* 식품산업 매출액은 2007년 108조 원에서 2010년 142조 원으로 증가



■ 농식품 수출은 2007년 38억 달러에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77억 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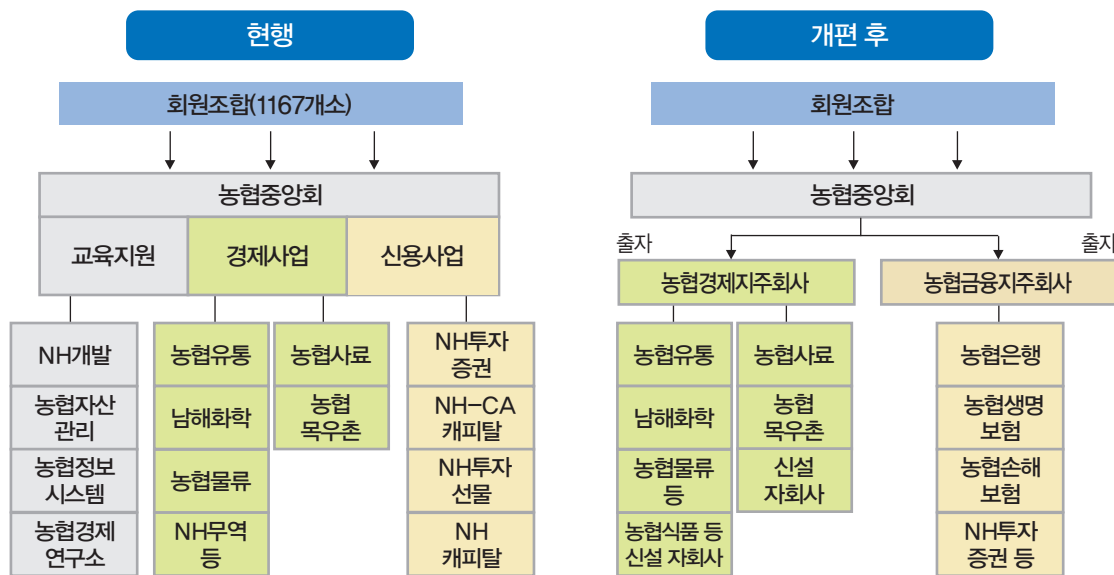
\* 농식품 수출액 : (1988) 32억 달러 → (2007) 38억 달러 → (2008) 45억 달러 → (2010) 58.8억 달러 → (2011) 77억 달러



**성과 18** 반세기 만에 농민의 숙원이던 농협 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제·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농협법 개정, 2011년 3월)
  - 원활한 구조 개편을 위해 부족 자본을 지원(5조 원)하고, 조세특례\* 조치(법인세, 취·등록세 면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전후 비교



-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3.2)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

## 성과 19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의 질도 개선하였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 9)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2011. 12)을 추진

●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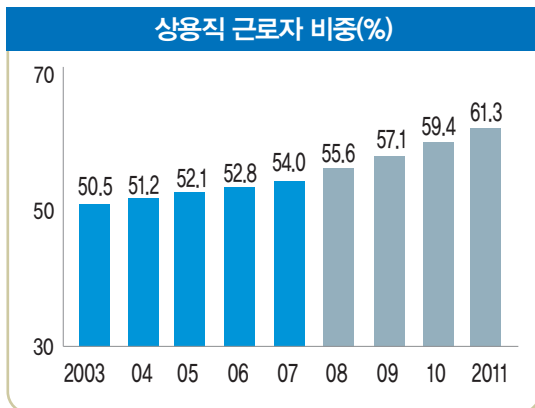
\* 2012년에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신규로 지원

● 공공 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직무분석 등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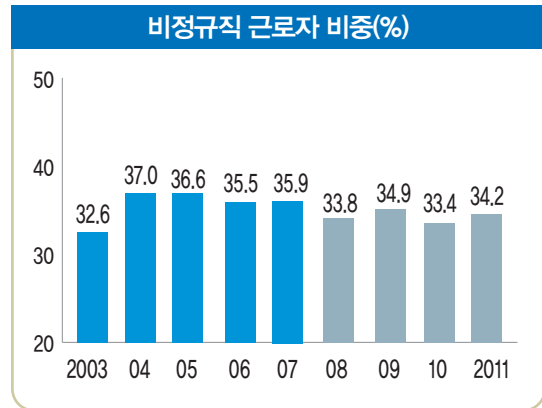
● 임금·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훈련 등을 통해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복지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의 대책도 추진 중

■ 경제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 고용의 질 개선

●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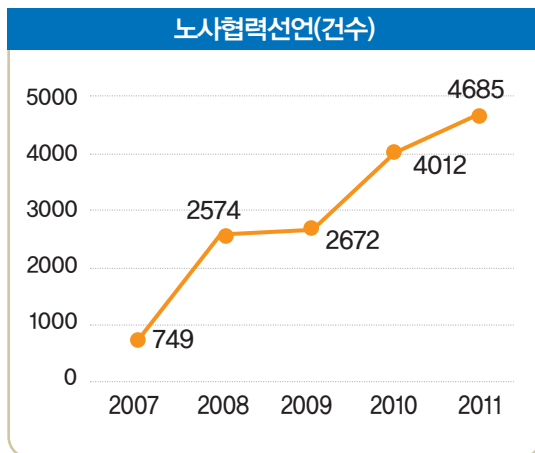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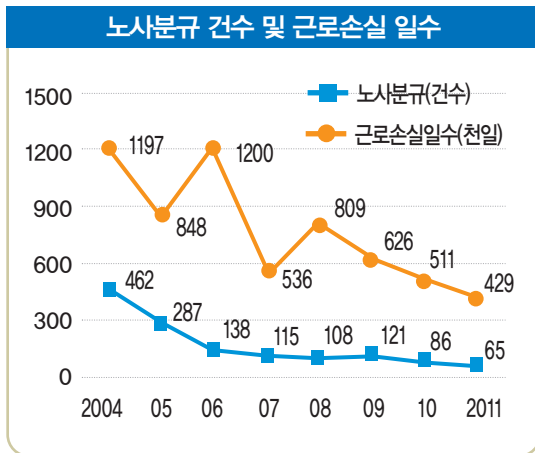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통계청(매년 8월 기준)

## 성과 20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제도 시행 등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
- 현장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의 견지, 노사갈등의 자율 해결 아래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추세
  -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 일수는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 중 노사협력선언도 2007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 노사분규 건수 : (2003~2007년 연평균) 264건→(2008~2010년 연평균) 10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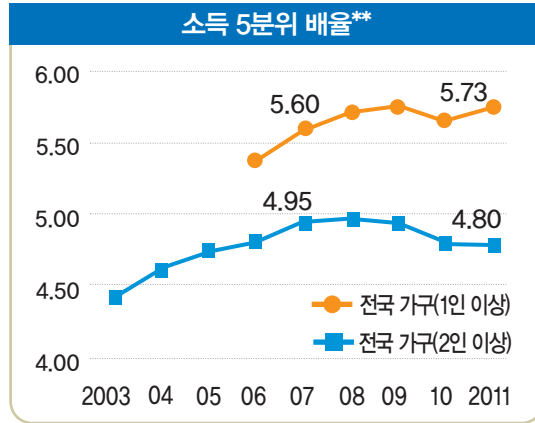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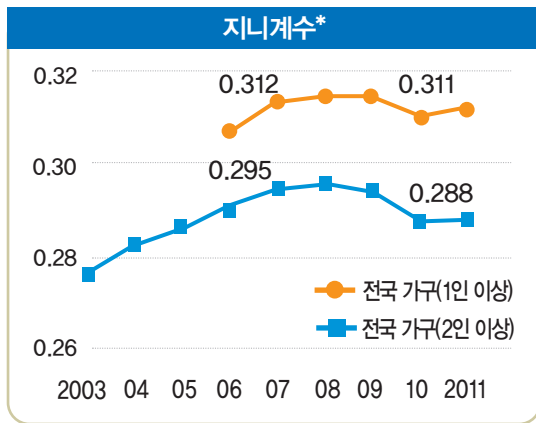
\* 근로손실 일수 : (2003~2007년 연평균) 101만6000일→(2008~2010년 연평균) 64만9000일

참고 1

# 이명박 정부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오해 1 부자 위주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2003년부터 악화되어온 소득 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다소 개선



\* 지니계수 :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클수록 분배 악화)

\*\*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클수록 분배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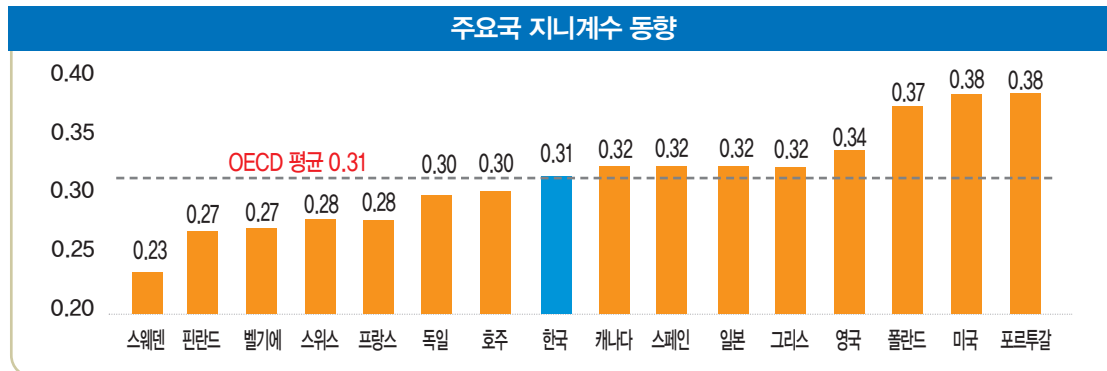
■ 정부 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 효과도 현 정부에서 확대

### 지니계수 개선효과 추이 (전국 가구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장소득 기준(A)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가처분소득 기준(B)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개선효과(A-B)	0.024	0.028	0.030	0.031	0.031	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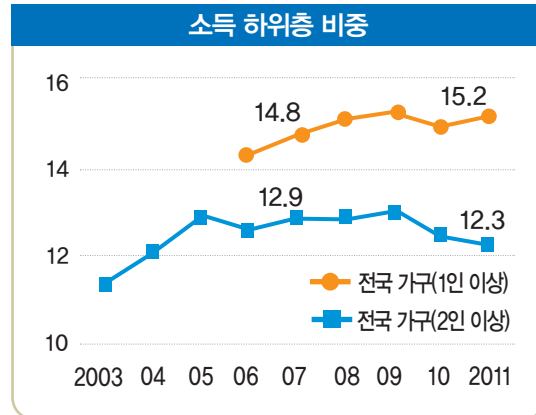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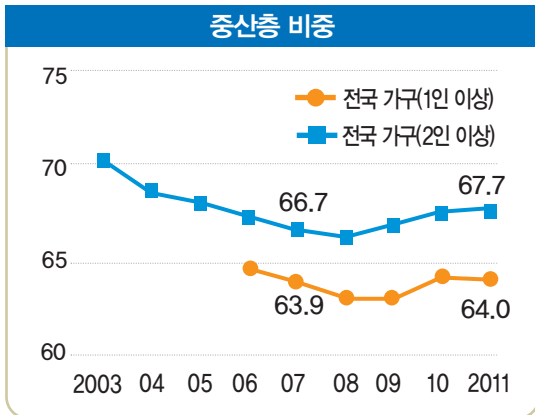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조세 +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이전소득

■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



## 오해 2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었다?

-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으며, 소득 하위층의 비중도 2인 가구 중심으로 감소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의 비중

\*\* 소득 하위층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중(상대적 빈곤율)

## 오해 3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고물가를 겪고 있다?

-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은 주로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인

\* 주요 품목 상승률(% , 2011년, 전년 동월 대비)

: (밀) 21.8 (옥수수) 57.0 (원당) 21.9 (철광석) 14.5 (원유) 35.6

- 그뿐만 아니라 2010년 이상기후로 사과, 배 등 농산물 작황 부진과 구제역으로 돼지의 30%가 살처분되는 등 자연재해 발생

-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

● 특히 성장세가 더딘 미국, 영국 등도 3~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와 성장률 추이(%)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소비자물가(2011)	4.0	3.2	4.5	6.6	8.5	8.9	5.4
성장률(2011)*	3.6	1.8	0.9	3.0	4.1	7.4	9.1

\* IMF 전망치(2012년 1월 발표), 단 한국은 2011년 4분기 속보치를 반영한 실적치



#### 오해 4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썼다?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수급 상황에 의해 변동

■ 원화는 2008년 이후 크게 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시(2009.3.2) 1570원 → 현재(2012.2.20) 1123원(39.8% 절상)

\* 원화 절상률(% , 기간 중) : (2009) 8.2 → (2010) 2.6 → (2011) △1.5 → (2012.1.~2012.2.20) 2.5

\* 주요국 통화 절상률(2009.3.2~2012.2.20, %)

한국	유로존	일본	인도	태국	브라질	대만	홍콩	캐나다
39.8	5.0	22.6	5.3	17.8	39.2	19.1	0.1	30.0

● 특히, 2011~2012년 중 원화는 주요국 통화보다 절상률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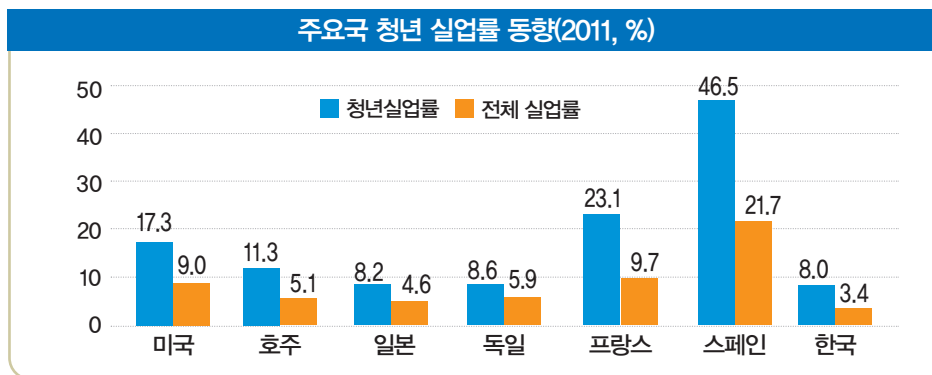
\* 주요국 통화 절상률(2011.1.1~2012.2.20, %)

한국	유로존	일본	인도	태국	브라질	대만	홍콩	캐나다
1.0	△0.2	2.4	△8.6	△2.0	△2.4	△1.1	0.4	0.8

#### 오해 5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

■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양호

\*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



## 오해 6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손해를 보았다?

### ■ 추가 협상 주요 내용

- 자동차(승용차) 관세를 양국 모두 발효 4년 후 완전 철폐  
\* 원 협정: (한국) 즉시 철폐, (미국) 3000cc 이하 즉시 철폐, 3000cc 이상은 3년간 균등 철폐
- 돼지고기 국내 수입 관세(25%) 철폐 시기는 14년 → 16년으로 연기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시점도 18개월 → 36개월로 연기
- 미국 내 우리 현지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도 1년 또는 3년 → 5년으로 연장

⇒ 추가 협상으로 대기업(완성차 업계)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나,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산업의 이익이 증대

### ■ 추가 협상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

- 자동차 추가 협상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도 환영  
- 특히 자동차 부품은 원 협정 그대로 관세 즉시 철폐 → 국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약 5000개, 30만 명 종사)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괄호는 자동차 분야 수출 중 부품 수출액 비중)  
: (2006) 25억9000만 달러(22.8%) → (2008) 27억 달러(26.8%) → (2010) 41억2000만 달러(37.9%)
- 추가 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  
\* 대한상의는 한미 FTA 지연 시 연간 15조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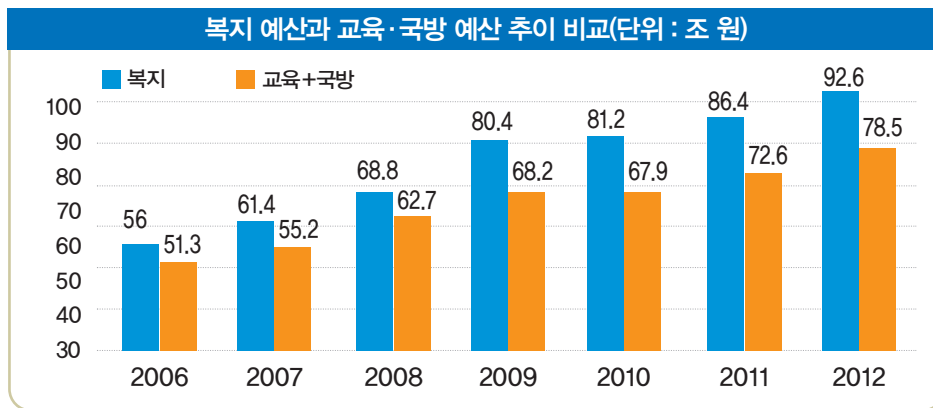
## 오해 7 현 정부가 복지를 소홀히 했다?

### ■ 복지 관련 예산은 역대 정부 중 절대액 면에서 최고로 투입

\* 복지 예산 : (2007) 61조4000억 원 → (2012) 92조6000억 원

\*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 : (2007) 25.8% → (2012) 28.5%

### ● 국방·교육 분야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으며, 현 정부 들어 그 격차가 더욱 확대



\* 2009년은 추경 포함 예산

### ■ 2008~2009년 경제위기 시 복지 재정지출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위기 극복에 기여

\*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25만 명, 1조3000억 원), 한시생계보호(46만 가구, 4000억 원) 및 긴급 복지 지원 확대(9만1000가구, 1500억 원) 등

### ■ 제도적으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 보장 및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의 기본 틀 완비

## 주요 복지제도 도입·확대 사례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 7)
  -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시설 입소, 방문 요양·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의 사회보험'
- ② 장애인연금(2010. 7) 및 활동 지원제도 시행(2011. 10)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근거법을 제정, 기존 제도(장애수당, 활동보조사업) 확대·개편
- ③ 양육수당 도입(2009. 7) 및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확대
  - 만 3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20만 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2012년 0~2세·5세, 2013년 만 0~5세 아동 전 계층으로 확대

참고 2

## 외국 언론이 본 한국 경제 4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가 위상도 제고. 이제 남은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지난 4년간의 외신 공통 논조)

### ■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 비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닥터 둠(Dr. Doom)’이라 불리는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자신마저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꼽음 (2009.6.1, 블룸버그)
- 2010년 1분기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2002년 말 이후 최고치인 8%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한국이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을 달성(2010.4.28, 파이낸셜타임스)
-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의 위기대응 사례를 본받아야 함(2010.11.8, 블룸버그의 윌리엄 페섹 칼럼)
- 세계가 경제위기를 단기에 극복한 한국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융개혁 등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통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쓰라린 경험이 이번 위기 극복의 토대가 됨(2011.1.7,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 ■ 대북 악재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

-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것은 취임 이후 중요한 구조 개혁을 여러 차례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 큼(2010.11.26, 월스트리트저널)
  -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 법인세율 인하, 노조법 시행 등 이명박 대통령의 구조 개혁들은 모두 한국의 투자 매력도 향상에 일조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국 당국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당국자들이 나서지 않아도 견실한 경제성장 전망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이유가 충분(2011.12.21, 파이낸셜타임스)

#### ■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더욱 높아진 한국의 국가 위상

-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반면 일본은 뒤로 물히게 될 것(2010.9.20, 닛케이)
-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2010.11.9, 타임)
  -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와 중국의 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혁신함으로써 또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됨
  - 한국인들은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며 개방을 확대
- G20 서울 정상회의는 1997~199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한국의 역사적인 세계무대 데뷔 행사(2010.11.10, 뉴욕타임스)
- 지난 10년간 아시아를 뒤덮었던 한류 열풍이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 수출은 한때 존재감이 없던 한국을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탈바꿈시킴(2012.2.11, 파이낸셜타임스)

#### ■ 적극적인 FTA 영토 확장 등 대외 개방을 확대

- 한·EU FTA는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타격을 줄 가능성(2010.10.7, 아사히)
  - 한·EU FTA 발효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일본 업체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놓이게 됨(2011.7.1, 닛케이)
- 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방될 것이며, 이 덕분에 한국인들은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2012.2.8, 월스트리트저널)

## 청와대 정책소식 과월호 안내

- 제51호 세계가 주목한 정상외교 2년
- 제52호 대한민국 기술명장을 길러내는 마이스터고
- 제53호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
- 제54호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한 환경성 질환 대책
- 제55호 죽어가는 4대강, 지금 꼭 살려야 합니다
- 제56호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보금자리주택
- 제57호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4% 컨택츠산업
- 제58호 우리고유의 맛과 멋- 한식세계화
- 제59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제60호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 제61호 서민이 편해지는 생활공감정책
- 제62호 대한민국의 녹색희망, 새만금
- 제63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 제64호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경제로 확산
- 제65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 제66호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열린 사회
- 특집호 물, 강, 그리고 생명이야기
- 제67호 규제개혁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제68호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 제69호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 제70호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이 이렇게 개선됩니다
- 제71호 내년 예산! 서민희망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 제72호 1조 2천억원 규모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 제73호 4대강의 진실
- 제74호 디지털방송 전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제75호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폐휴대폰 재활용
- 제76호 4대강 사업 예산의 오해와 진실
- 제77호 인허가 규제의 틀이 100여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 제78호 세계 최대 시장을 연 한-EU-FTA
- 제79호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제80호 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제81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 제82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 제83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 제84호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제85호 서민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제86호 구제역,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87호 지금은 서민 복지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 제88호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 제89호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결과
- 제90호 기후 급변과 국정 대응방안

- 제91호 “농협 선진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제92호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치 창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 제93호 대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제94호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9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두르겠습니다
- 제96호 ‘전관예우’ 이렇게 뿌리뽑겠습니다
- 제97호 소외되었던 이웃 2만3669명이 다시 웃었습니다
- 제98호 이명박 정부가 14년 동안 유예돼 온 복수노조 제도를 노사정 합의로 시행합니다
- 제99호 서민과 소외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최대한 돕겠습니다
- 제100호 한국 경제 성적표(G20 국가와 비교)
- 제101호 만5세 어린이들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제102호 서민 체감경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03호 4대강 새물결 준비되었습니다
- 제104호 국민 권익보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 제105호 내년에는 국민 세금을 주로 일자리와 복지에 쓰겠습니다(2012년 예산안)
- 제106호 공기업들이 녹색도시·녹색건축으로 ‘지방시대’를 엽니다
- 제107호 <광역경제권정책 4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제108호 한미 FTA, 정확히 아시나요?
- 제109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좋은 물건도 사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착한 소비입니다
- 제110호 학교폭력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제111호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제112호 2012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2개 부처 및 4개 위원회 업무계획>
- 제113호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100% 활용하기
- 제114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청와대 정책소식 - 2009년 2월 23일 창간

펴낸이 - 이등우 기획관리실장

역은이 - 최원목 국정과제1 비서관

대통령실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